

2009년도 지방예산의 운용방향

박 성 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I. 머리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시켜 전 세계의 실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내수경기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둔화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4%의 마이너스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경제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재정, 세제정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한단계 도약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초아래 신산업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의 확충,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지방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인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은 국가의존도 등 그 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경제정책과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운영하여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소극적 의미의 재정정책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역할을 완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지방재정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국정전략과 과제들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생활공감형’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과 낭비를 최대한 없애고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명확한 미래비전을 세워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II. 2009년도 지방예산의 현실

(1)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으로 총 137조 5,349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치단체내 또는 자치단체간에 주고 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출되는 예산순계 개념을 적용하여 집계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9조 4,510억원, 특별회계는 28조 83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주요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84조 5,264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3조 85억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증가하였다. 세출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전년대비 17.6%나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구 분	'08년 당초예산	비중(%)	'09년 당초예산	비중(%)	증가율(%)
계	124조 9,666억원	100	137조 5,349억원	100	10.1
자체재원	77조 1,471억원	61.7	84조 5,264억원	61.5	9.6
지 방 세	43조 5,497억원	34.8	47조 0,670억원	34.2	8.1
세외수입	30조 1,004억원	24.1	33조 6,238억원	24.4	11.7
지 방 채	3조 4,970억원	2.8	3조 8,356억원	2.8	9.7
의존재원	47조 8,195억원	38.3	53조 0,085억원	38.5	10.9
지방교부세	24조 1,296억원	19.3	26조 5,081억원	19.3	9.9
국고보조금	23조 6,899억원	19.0	26조 5,004억원	19.3	11.9

〈세출기능별 예산규모〉

기능 별 (분 야)	재 원 규 모	비 중
일 반 공 공 행 정	10조 3,270 억원	7.5%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조 9,680 억원	1.4%
교 육	7조 8,785 억원	5.7%
문 화 및 관 광	7조 938 억원	5.2%
환 경 보 호	14조 3,932 억원	10.5%
사 회 복 지	24조 1,455 억원	17.6%
보 건	1조 9,241 억원	1.4%
농 립 해 양 수 산	9조 2,593 억원	6.7%
산 업 · 중 소 기 업	2조 9,251 억원	2.1%
수 송 및 교 통	18조 3,886 억원	13.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4조 5,149 억원	10.6%
과 학 기 술	7,419 억원	0.5%
예 비 비	2조 3,561 억원	1.7%
기타(행정운영경비)	21조 6,189 억원	15.7%

(2) 지방재정의 한계

지방재정은 그간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했다. 총 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할때, 지방의 재정사용액은 2004년부터 국가재정 사용액을 초과했고 2009년 현재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사용액은 48.5:51.5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도 자치단체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하여 자율적 자원조달 능력이 미흡하다. 이와 반대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국가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경우 민선자치가 시작된 해인 95년에는 전국평균 63.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에는 53.6%까지 하락하였다.

〈재정사용액 : 국가 41:6 : 지방 58.4〉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09예산
중앙정부	1,059,118	1,085,522	1,111,272	1,048,450	1,105,467	1,266,026
(비중)	48.4	47.2	46.1	42.3	40.3	41.6
자치단체	826,354	888,928	976,066	1,080,497	1,235,229	1,346,517
(비중)	37.7	38.6	40.5	43.6	45.1	44.3
지방교육	304,518	327,642	324,699	350,831	399,919	427,326
(비중)	13.9	14.2	13.4	14.1	14.6	14.1

또한,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인 교부세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의 19.2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이와 함께 사회복지, 교육관련 투자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결국 국고보조사업에 충당하기도 바빴던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세 수입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지역간, 자치단체간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간 격차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중에도 서울과 기타 광역시, 도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각하며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시와 군지역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자치단체의 3%인 7개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14개(46%)에 달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재정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재 정 자 립 도〉

유형별	전 국	특별시 (본청)	광역시 (본청)	도 (본청)	특별자치도 (본청)	시	군	자치구
평 균	53.6	90.4	57.9	33.9	24.9	40.7	17.8	37.3
최 고 (단체)	-	90.4 서울	75.7 인천	64.1 경기	24.9 제주	72.9 경기용인	56.7 울산울주	85.7 서울중구
최 저 (단체)	-	-	42.9 광주	10.4 전남	-	9.9 전북남원	7.2 전남완도	13.6 부산서구

Ⅲ. 2009년도 중점 추진정책

1.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은 2009년도 지방재정의 추진 정책중 최우선과제이다. 세계 금융위기로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둔화되는 등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재정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까지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조기추경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3월 이전에 제1회 추경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하여 1월에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9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파격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채 발행의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 2년간 약 1%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인 조기집행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아야 하며, 예산이 통과한 다음 날부터 예산이 집행될 정도로 급한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언급하고 공공재정의 시장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부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으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였다. 상반기내 90%이상을 발주하고, 60%이상의 자금집행을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 10일 → 5일)하도록 하고,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09.10월까지)으로 확대(1천만원→5천만원) 하였으며,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하였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제1회 추경은 3월 이전으로 앞당기어 실시하고, 자치단체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하였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를 도입하였고, 미지급시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였고,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 인상하였다. 그 밖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예규도 개정(1.30)하였으며, 개산(概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현행 재해복구공사→2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로사업 등, 10.31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앞당겨 신속하게 집행하다보면, 경비의 절감이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 등을 간과하여 일부 낭비적 요소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정의 조기집행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도 2009년도 지방재정운용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재정집행과정에서 효과가 배가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과정에 비효율·비생산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뜰하게 잘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재정 조기집행과 지출확대는 필수적인 재정운용 기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은 종합부동산세 위험판결 및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법정교부세·주민세 감소 등으로 '08~'09년에는 총 5조원, 10년 이후에는 매년 약 7~8조원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 감소규모 추계〉

(단위 : 조원)

구 분	계	'08	'09	'10	'11
총 계	△20.7	△0.9	△4.4	△7.6	△7.8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전액)	△ 7.3	△0.9	△1.8	△2.3	△2.3
■법정교부세 (내국세×19.24%)	△ 9.1	(△0.8)	△1.8	△3.6	△3.7
■주민세 (소득·법인세×10%)	△ 4.3	(△0.4)	△0.8	△1.7	△1.8

* '10년 이후 감소규모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세제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일부 수정이 예상됨

* '08년 법정교부세 감소(△0.8) 및 소득할 주민세 감소(△0.4) 부분은 지방재정 감소규모에 포함하지 않음 (국가재정 부담 가중 등을 고려)

이에 정부는 '08~'09년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09년 중앙예산에 1.86조원을 목적 예비비로 반영하였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분 1.33조원과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부세로 환급재원을 충당함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0.53조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지난해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10년 이후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은 2009년도 상반기까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체제 개편방안 마련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9년도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해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밀한 준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의 문제는 '08.12.15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쳐 발표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09년 상반기까지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09.2.5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전문가 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협의하여 균형발전위원회가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개편시안을 2~3월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동 TF에는 균형발전위원회 2명, 행정안전부 2명, 기획재정부 2명, 교육과학기술부 1명, 보건복지부 1명을 각각 추천받아 구성하게 된다. 4월중에는 자치단체 협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5월말에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7~8월에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관련 주요 쟁점사항〉

추진과제	행안부	재정부
① 종부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방안	· 종부세법 위헌판결에 따른 세수감소 및 환급재원, 소득세·법인세 등 개편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 지방재정 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 종부세 위헌판결에 따른 세수감소, 소득세·법인세 개편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대해서는 보전 불가
② 목적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부세율 조정	· 지방교부세 법정을 현행유지	· 지방교부세 법정을 하향조정
③ 분권교부세 발전적 개편	· 국고보조사업 환원 혹은 별도 재원 대책 강구 필요	· '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통합 운영
④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 반드시 도입 필요	· 도입 반대
※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및 최저한 세율제 개선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 있음	· 지방소득소비세 대체방안으로 재정부가 제시한 대안

추진과제	행안부	재정부
※ 지역발전인센티브 도입 *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액 중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교부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근본적인 대책임	· 지방소득소비세 대체방안으로 재정 부가 제시한 대안
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원방안	· 수도권 국세·지방세·부담금 증가분을 재원으로 (가칭) 지방발전 지원기금 신설,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저리 융자, 이차 보전 등 지원	· 국가가 별도 지원(국세·부담금 일부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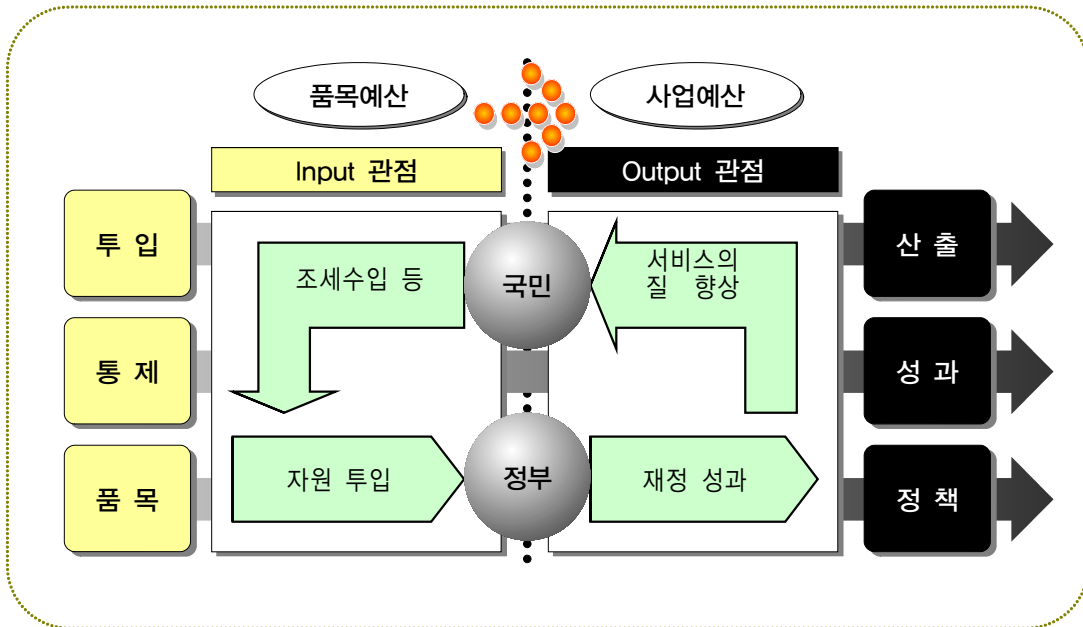
* 재정부 입장은 지난해 실무자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현재의 입장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렇듯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존의 자원배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 과제들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득·소비세의 신설은 중앙-지방간 자원배분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실증자료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

1)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지속 추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방예산제도가 품목중심에서 성과지향의 예산제도로 전환되어 '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서 전략적인 자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여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품목예산제도에 비해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예산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바라던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예산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구조화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본질적인 목표인 성과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부터 구축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 지방채발행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활성화

지금까지 지방채발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을 방지하는 방어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방어적 기능보다 경기조절 역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사후보고로 같음하도록 업무처리 방침을 시달하였다.

지방채발행제도는 총액한도 내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자체발행을 하고,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사업과 외채·조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러한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채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총액한도제 도입('06.1월)은 적정수준의 채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효

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한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의 개선이 필요하고, 발행에 소극적이고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 상향조정 등 산정방식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적인 지방채 인수자금의 확보를 위해 ‘지방발전지원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 지방발전지원기금(가칭) :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 지방소비세 도입시 그 일정분, 수도권 부담금 상향·신설 재원, 복권기금 일부 및 자체채권 등으로 한 기금 조성·운영

3)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강화

지방재정분석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나아갈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간 비교·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정해지리라 생각한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98년부터 10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해 오다 '05년부터는 지방재정규모 확대 및 자율성 강화에 따라 재정분석지표를 전면 개편하여 30개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다가 '08년에는 자치단체 수용성 강화를 위해 16개 계량지표를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자체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불건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고, 지표별 '적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재정분석을 가지고 지표별 적정기준에 적합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였다.

〈2009년도 개선내용〉

분석주체	· 광역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업무위탁)
분석방법	· 서면자료 분석	⇒	· 1차분석 : e-호조 1차 분석, 진단단체 선정 · 2차분석 : 심층진단 및 246개 단체 재정분석
분석지표	· 계량 16개(비계량 ×)	⇒	· 계량 및 비계량 분석지표(사업예산제도)
시행시기	· 9월 중순(결산결과)	⇒	· 3월(e-호조 활용)

2009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분석 및 신속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 발생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출납사무가 완결되는 4월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정분석을 한 후 미흡단체 발생시 심층진단 단체로 선정하고(1차분석, 예비분석), 결산 승인이 완료되는 8월부터 심층진단 및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실시(2차 분석, 확인분석)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경제위기 극복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위험의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광범위하고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정밀하게 재정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009년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하는 난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지방재정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문제는 추진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우선 염두에 두고, 문제제기에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해결하는 방안을 서로 간에 찾을 있도록 행정력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는 재정운용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이를 현재에서부터 차근 차근 준비를 해야한다. ‘위기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명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야겠다.

한편, 2009년도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지방자치 특히 재정분권은 이해당사자의 권리주장과 관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 해가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09년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

